

2021. 5. 7.

문재인 정부 4주년 **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**

- 위기를 기회로,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-

기 획 재 정 부

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

I.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흐름	1
II.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노력	3
III. 우리 경제 10대 성과	12
1. 위기충격 최소화 &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	13
2.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	14
3. 대외건전성,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	15
4.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“제2의 벤처붐” 확산	16
5. DNA · 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	17
6. 선제적·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	18
7. 기업지배구조 개선 &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	19
8. 일자리 · 가계소득 확충 & 코로나 충격 최소화	20
9.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·고용안전망 구축	21
10.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	22
IV.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	23

I.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흐름

◇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**저성장** 및 **양극화 심화**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「**사람 중심 경제**」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

- “**혁신·포용·공정**”의 3대 가치에 입각한 **정책기조를 견지**하면서 정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는 이를 발전적으로 **적응·보완**하여 **일관되게 추진**



1. '17~'18년 : 3축 경제 기반 구축

① (**배경**)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**성장이 빠르게 둔화**되는 가운데 **분배까지 악화**되면서 **구조적·복합적 어려움**에 직면

-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가계-기업, 대-중소 기업 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은 한계 노출
- 전세계적으로도 저성장 및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**포용적 성장**이 대안으로 부각

* OECD·IMF 등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및 소득재분배를 병행하는 포용성장론 확산, 미국·일본 등 주요국도 가계소득 확충 등을 통해 분배-성장간 선순환 추구

② (**정책기조**)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「**사람 중심 경제**」로의 **패러다임 대전환**에 착수

- 「**소득주도성장-혁신성장-공정경제**」 3축 경제 **기반 구축**에 주력
 - 소득주도성장 : 가계소득 증대/생계비 경감/사회안전망 확충 등
 - 혁신성장 : 창업생태계 강화/규제혁신/신산업 지원 등
 - 공정경제 : 불공정거래 근절/대·중소기업 상생 등

⇒ **가계소득 확충, 혁신 분위기 조성, 불공정 관행 개선** 등 의미있는 변화 시작

2. '19년 :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진전

- ① **(배경)** 3축 경제 기반 구축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경제의 성장·교역 둔화 등 **대외여건 악화**로 인해 국내경기 측면에서 어려움이 확대

* '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(IMF, %) : ('18.10) 3.7 → ('19.4) 3.3 → ('19.10) 3.0

* '19년 세계교역 증가 전망(IMF, %) : ('18.10) 4.0 → ('19.4) 3.4 → ('19.10) 1.1

-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, 1인가구 증가, 4차 산업 혁명 진전 등 경제·사회 **구조적 변화**도 본격화

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, 장래인구추계) : ('19)△5.6 → ('20)△23.1

* 1인 가구 비중(%) : ('05) 20.0 → ('10) 23.9 → ('18) 29.3 → ('19) 30.2

- ② **(정책기조)** 그간 구축된 3축 경제의 토대 위에서 「**혁신적 포용 국가**」 구현을 위한 **구체적 성과 창출**에 정책 역량을 집중

- “D.N.A+BIG3”로 대변되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

⇒ **벤처·창업 활성화** 등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, 일자리 등에서 정부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며 **고용·분배여건도 점차 개선**

3. '20년 이후 : 코로나 위기 극복 + 선도형 경제 도약 추진

- ① **(배경)** '20년 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**극심한 경기침체**와 **구조적 대변혁**에 직면

- 당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·교역 회복* 등에 따른 성장세 개선 전망 하에 **패러다임 전환도 가속화**될 것으로 기대됐으나,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상황 전개

* '19.10월 IMF 세계경제 전망(% , '19→'20년) : (성장) 3.0 → 3.4 (교역) 1.1 → 3.2

- ② **(정책기조)** 코로나 위기에 대응, **비상경제체제**로 **신속 전환**하여 **당면한 위기극복**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

- 포스트코로나 시대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한국판 뉴딜, 2050 탄소중립 추진 등 **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**을 위한 정책노력도 병행

⇒ **주요국 대비 경제충격을 최소화**한 가운데 **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이전 수준 회복**

Ⅱ.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노력

1. 코로나19 이전 ('17-'19년)

◇ 저성장·양극화 등 우리 경제에 누적된 **구조적 문제를 해결**하고 **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**하기 위해 **경제 패러다임 전환** 착수

☞ **“혁신·포용·공정”**의 3대 가치를 **경제·사회 전반에 착근**시키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면서 이에 기반한 **성과 창출** 노력도 강화

① 산업생태계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.

① 새로운 도전 및 **“제2 벤처 붐” 확산** 지원을 위해 창업-성장-회수-재도전에 이르는 **성장단계별 지원** 강화

창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민간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(공공기관 → 민간 벤처전문가)▶ 예비창업자 패키지 지원, 기술창업기업 TIPS 지원▶ 메이커스페이스,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공간 조성 지원
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(~'20년),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(~'22년)▶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(BDC) 도입▶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, 혁신아이콘 기업지원 등
회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M&A 전용펀드 조성('19~'20년 0.8조원)▶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&A시 세액공제 일몰 연장('18년말 → '21년말)
재도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법인사업자 연대보증 채무(2.8만명, 5.4조원 대상) 채무조정·상환유예

② **규제 샌드박스, 규제자유특구 도입** 등 규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핵심규제 혁파 노력 지속

- ▶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으로 신기술·신산업 시도를 위한 **돌파구 마련**(현재 449건 승인)
 - 규제샌드박스 1+4법 완성, 규제특례 3종 세트(신속확인¹⁾, 임시허가²⁾, 실증특례³⁾) 도입
 - 1) 규제 존재 여부·내용 문의 →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
 - 2) 법령 모호·불합리시 →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
 - 3) 법령 모호·불합리·금지시 →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
- ▶ **포괄적 네거티브**(先허용-後규제) 방식으로 **규제체계 전면 전환**
- ▶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하면 자동폐지되는 **규제입증책임제** 도입
- ▶ **규제자유특구**(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) **지정**을 통해 R&D·사업화·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

③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D.N.A, BIG3 등 전략투자 분야 집중 지원

▶ D.N.A 등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혁신 인프라 투자 확대

- * (5G) 스마트폰 5G 상용화 (데이터)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21종 구축,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(AI) AI허브 구축, 제품·서비스 개발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(수소경제)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 선정

▶ 신산업 투자의 마중물로써 8대 선도산업¹⁾ 육성을 추진하고, 특히, 산업 파급 효과 및 체감도가 큰 3개 분야(BIG3)²⁾ 집중 지원

- 1) 스마트공장, 바이오헬스, 핀테크, 미래차,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에너지신산업, 드론
- 2)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

▶ 세제·금융·R&D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신산업 확산 뒷받침

세제	▶ 신성장 R&D 세액공제 대상 확대, 5G 네트워크 투자 세액공제 신설 등
금융	▶ 혁신분야 정책금융 확대('19년 53조원),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('19~'21년 10조원) ▶ 일괄담보제도 도입,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한 등산담보대출 확대
R&D	▶ R&D 예산 확충('19년 20.5조원), R&D 예타 기간 단축(1년 이상 → 6개월 내외)

④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

▶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추진

- * ①반도체, ②디스플레이, ③자동차, ④전기전자, ⑤기계·금속, ⑥기초화학

▶ 「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」 출범('19.10월), 「소부장 특별법」 제정('19.12월), 「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」 신설('21년~)로 매년 2조원 이상 투자 추진

▶ 소부장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제·금융 지원 강화

- * (세제)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&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 추가,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확대(주식취득 → 사업자산양수도 포함)
- (금융) 소부장 중소기업 1조원 보증프로그램 신설, 모태펀드 내 전용펀드(1천억원) 신설

⑤ 일자리·부가가치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혁신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을 함께 추진

▶ 「서비스산업 혁신전략」*을 마련('19.6월)하고, 관광·보건·콘텐츠·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육성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

- * ①제정·세제·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 완화
- ②서비스업 R&D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, ③서비스업-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지원 등

▶ 「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」을 수립(19.6월)하여 제조업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, 주요 산업별(자동차, 조선, 석유화학) 발전전략도 마련

- * (미래차) 전기수소차,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(조선) '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 발주 (석유화학)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('19~'23년, 약 90만평)

2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나갔습니다.

1 민간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세제·재정·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 추진

- ▶ **(고용친화적 세제 개편)** 투자와 고용이 연계되어있던 기존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 **고용증대세제 도입** 및 확대 개편
- ▶ **(상생형 지역일자리)** 적정임금·근로조건, 노사분규 자제, 주민협력 등을 포함한 지역 노사민정의 **상생협약**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('19.1~'21.2월, 8개 지역)
* ('19) 광주, 강원, 밀양, 구미, 군산, 대구
- ▶ **(일자리 질 제고)**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①**최저임금 인상**,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②**주52시간제 도입**, ③**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** 등 중점 추진
- ▶ **(맞춤형 일자리 지원)** 청년·여성·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
* (청년) 청년추가고용장려금('18.3월~), 청년구직활동지원금('19.5월~),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('19년~) 등
(여성) 아이돌봄 등 직접일자리 확대('17년 2.8 → '19년 3.2만명), 세일센터 경력단절 지원 강화
(노인·신중년) 노인일자리 확대('17년 49.6 → '19년 68.4만명), 「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」 마련('18) 등

2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제고를 위해 핵심 생계비 경감 추진

의료	▶ 비급여 축소, 본인부담률 인하,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보 보장성 강화
교육	▶ 고교무상교육('19년 고3 → '20년 고2·3 → '21년 전학년),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등
교통	▶ 알뜰교통카드 운영(교통비 30% 절감),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
통신	▶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상향(20 → 25%),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
주거	▶ 공적임대주택 확대('17년 13 → '19년 18만호), 주거급여 상향('17년 11.6 → '19년 12.5만원) 등
금융	▶ 법정 최고금리 인하(27.9 → 24%('18.2월)),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

3 저소득·취약계층 등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역점

- ▶ **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**(주거급여 '18.10월 폐지, 생계급여 '22년까지 단계적 폐지)
- ▶ **근로장려금 요건완화**(연령제한 폐지소득요건 완화) 및 **지원액 확대**(85/200/250 → 150/260/300만원)
- ▶ **기초연금 조기인상**(25 → 30만원, '19.4월, 노인소득 하위 20%), **아동수당 10만원 지급**('18.9월 소득하위 90%, '19.4월 모든 6세 미만(1~3월 소급지급), '19.9월부터 모든 7세 미만)
- ▶ **실업급여 보장성 강화**(지급액 상향(평균임금의 50 → 60%) + 지급기간 연장(최대 8 → 9개월))
- ▶ **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**('18년 중증·희귀질환자 추가) 및 **단가 상향**('17년 9.5 → '19년 10.9만원)

③ **공정·상생 가치 확산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.**

① 대주주 권한남용 방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억제, 금융그룹 재무 건전성 확보 등 **공정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** <공정경제 3법 제·개정>

* `18.11월 국회제출(임기만료 폐기) → `20.8월 국회제출·12월 본회의 의결

- ▶ 다중대표소송 도입,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 등(상법 개정)
- ▶ 사익편취 규제 강화,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,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및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등(공정거래법 개정)
- ▶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관리 및 재무정보 보고·공시 의무화(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)

-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(`18.7월)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·기업가치 제고 추진

② 하도급(`17.12월)·유통(`17.8월)·가맹(`17.7월)·대리점(`18.5월) 등 갑·을 관계가 관행화된 **4대 분야**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

하도급	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·원가정보 요구 금지,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(최저임금 인상시에도 허용) 등
유통	▶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, 과징금 부과율 2배 상향, 판매수수료를 실태조사 및 공개 등
가맹	▶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,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,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
대리점	▶ 대리점 협상력 제고 위한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 등

③ **대·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**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- ▶ 2·3차 협력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**상생결제 지급 의무화**(`18.9월)
- ▶ 대기업 등의 **상생협력기금 출연** 근거 마련 및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
- ▶ **자발적 상생협력 기업**(`19.5월~, 28개)을 통해 **소상공인 디지털화·제조업 스마트화** 지원

2. 코로나19 이후 ('20년~)

◇ '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**극심한 경기침체**와 **구조적 대변혁**에 직면

① 우리 정부도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**비상경제체제**로 신속하게 전환
→ 전례없는 **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** 추진

*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운영(8회),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중대본 가동(34회)

② 위기상황 속에서도 **경제체질 개선 노력**을 지속하고,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「**한국판 뉴딜**」 발표·추진

'20년중 총 **310조원** 규모(GDP 16% 수준) 지원대책 추진

버티기 **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**

- ✓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- ✓ 고용 유지·안정
- ✓ 금융안정 지원
- ✓ 업종별 피해극복 지원
- ✓ 가계소득 지원

일어서기 **빠르고 강한 경제회복**

- ✓ 소비진작 유도
- ✓ 관광 회복 촉진
- ✓ 투자 활성화
- ✓ 수출력 견지

Jump-up **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**

- ✓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
- ✓ 탄소중립 추진
- ✓ 새성장동력 육성
- ✓ 인구구조 변화 대응
- ✓ 포용기반 확충

① **경제주체들이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뒀습니다.**

① (**소상공인 지원**)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생계 어려움 극복을 위해 **현금지원·비용경감** 등 패키지 지원

- 영업제한·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^{20.4차추경}, 버팀목자금
맞춤형대책, 버팀목+자금^{21추경} 등 총 14.1조원 규모 현금지원

* 14.1조원=새희망 3.3조원(294만명)+버팀목 4.1조원(280만명)+버팀목+ 6.7조원(385만명)

※ (1인당 지원) 집합금지업종 최대 1,000만원 = 새희망 200+버팀목 300+버팀목+ 500

	지원규모	업종별 지원금액(만원)		
		집합금지업종	집합제한업종	일반업종
계	14.1조원	최대 1,000	최대 650	최대 500
새희망	3.3조원(294만명)	200	150	100
버팀목	4.1조원(280만명)	300	200	100
버팀목+	6.7조원(385만명)	연장 500 / 완화 400	300	100~경영위기 300

- 향후 발생가능한 방역상황 대비 **피해지원 제도화 방안**도 마련중

▪ 공공요금·사회보험료·임대료 등 **고정비용 부담 경감** 추진

- ▶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소상공인 **전기요금 3개월분 감면**(`21.3월~)
- ▶ 고용보험료 납부유예, 산재보험료 감면·납부유예, 국민연금 납부유예
- ▶ 「착한 임대인」 임대료 인하분 최대 70% 세액공제 지원(~`21년말)

② (**고용유지·안정**) 민생의 근간인 **일자리**를 지켜내기 위해 민간·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총력 지원

- ▶ **특고·프리랜서, 법인택시기사 등 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** 지급
 - * 특고·프리랜서 등 대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및 지급(`20년~)
 - (1차, `20.6~9월) 150만명 (2차, `20.9~12월) 61만명 (3차, `21.1~3월) 68만명 (4차, `21.3~5월) 기수혜자 67만명 지급, 신규 심사 중
- ▶ **직접일자리·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** 총력
 - * 직접일자리 `20년 94.5만명 → `21년 104.2만명(본예산 기준)
- ▶ **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**로 민간기업 “일자리 지키기” 노력 뒷받침
 - *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적용받는 ‘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’ 지정(여행, 관광, 공연업 등)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, 지원비율 확대(휴업·휴직수당의 50~67% → 67~90%) 등

③ (**기업 자금으로 해소·금융안정**)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**「175조원 + α 민생·금융안정패키지」** 가동

- ▶ (**기업자금지원: 62조원**)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, 특례·전액보증 등
- ▶ (**금융시장 안정화 장치: 73조원**) 코로나 피해 P-CBO,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·CP 매입기구, 회사채·CP 신속인수·차환지원, 증권·채권시장안정펀드 등
- ▶ (**기간산업안정기금: 40조원**) 국민경제 영향이 큰 항공·해운 등 기간산업 자금 지원

▪ 특히,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금융지원 및 시설사용료·임대료 부담경감 등 **업종별 지원대책** 마련

- ▶ (**항공**) 공항사용료 감면 LCC 금융지원 등
- ▶ (**공연**) 공연장 대관료 등 **제작비** 지원
- ▶ (**관광**)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신설 등
- ▶ (**외식**) 외식업체 육성자금 금리인하 등
- ▶ (**해운**)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
- ▶ (**자동차**) 부품산업 시설투자자금 지원 등

④ (**가계소득 확충 지원**) 코로나發 경영·고용위축에 따른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계소득 지원

- ▶ (**전국민 재난지원금**) ^{1인}40만원/^{2인}60만원/^{3인}80만원/^{4인이상}100만원(총 14.3조원)
- ▶ (**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**)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보다 요건 완화하여 신속지원(`20년 0.35조원, `21년 0.4조원)

②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·반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.

① (내수 진작) 재정·세제지원 신설, 방역상황을 고려한 소비·관광 행사 등 내수활력 복원을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 추진

- 대규모 재정지원, 한시적 조세감면 등을 통해 피해분야를 중심으로 소비활동 적극 뒷받침 **〈방역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〉**

- ▶ **지역사랑·온누리 상품권**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도 상향(5→10%)
 - * 지역사랑상품권(조원): ('19) 2.3 ('20) 9 ('21) 15 / 온누리상품권(조원): ('19) 2 ('20) 4 ('21) 3
- ▶ **피해업종 대상 8대 소비쿠폰**('20년 0.2조원) 및 **4+4 바우처·쿠폰**('21년 0.5조원) 시행
 - * (8대 소비쿠폰) 숙박, 관광, 공연, 영화, 전시, 농수산물, 외식, 체육
 - * (4대 바우처) 통합문화이용권·스포츠강좌이용권·농산물구매지원·근로자휴가지원 (4대 쿠폰) 농수산물·외식·체육·숙박
- ▶ **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금액의 10% 환급**('20년 3,000억원, '21년 700억원)
- ▶ **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** 지속
 - * ('20.3~6) 70% 인하 → ('20.7~12) 30% 인하 → ('21.1~6) 30% 인하
- ▶ **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**

'20년	'21년
· '20.4~7월중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(15~40% → 80%)	· '20년대비 사용액 증가분 특별공제 신설
· 공제한도 30만원 인상(200~300→ 230~330만원)	- (공제율) 5% 이상 증가분 10% 공제
	- (공제한도) 별도한도 100만원 적용

-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규모 소비·관광행사도 차질없이 추진

- ▶ **대한민국 동행세일**(6.26~7.12), **특별여행주간**^{*}(7.1~19), **코리아세일페스타**(11.1~11.15) 등
 - * 비대면 트렌드에 맞춘 관광지 소개, 관광지 방문 이벤트 +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 등(2만명 대상)
- ▶ **국립 문화·예술시설 입장료 50% 한시 인하**('20.3~6월)

② (투자 활성화) 투자 프로젝트 추진, 세제·금융 지원 확대, 유턴 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회복 모멘텀 구축·확산

- 기업·민자·공공 투자프로젝트('20년 100조원 → '21년 110조원)를 추진하여 프로젝트별 투자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등 지원
 - * '20년 100조원 목표 초과달성(103.7조원), '21년에도 정상 추진 중(3월말까지 29.6조원)

※ 주요 투자애로 해소 사례

- ▶ **여수 석유화학공장**(5조): 공업용수 공급 부족 우려 → **용수배관 복선화** 등 보강공사
- ▶ **동탄 복합시설 개발**(1.2조): 기존시설물 철거시 재산손실보상금 부담주체에 대한 기관간 이견으로 공사 지연 → **선시공·후보상금 협의**를 통해 우선 공사 착수
- ▶ **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**(0.2조): 희망 산단내 인조흑연 제조공장 건립 불가 → 부품소재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**입주 가능업종 확대**
- ▶ **인천 복합쇼핑몰 건립**(1.3조): 인근 하수처리장 포화로 건립 애로 → **하수장 조기 증설**

▪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제·금융지원 확대

- ▶ (세제) 기존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통합·단순화한 **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**,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(5→10년), **가속상각 한시 허용**(‘21년) 등
- ▶ (금융) **‘20년 설비투자 불입 프로그램 신설**(4.5조원) 등 정책금융 **10.5조원** 집중 지원

▪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 등에 대응한 **유턴기업 지원** 대폭 강화

- ▶ (재정) **유턴보조금 신설** 및 **지원수준 대폭 확대**(기업당 100억원→300억원), 협력형·첨단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 5%p 상향
- ▶ (세제) **해외생산 50% 감축 요건 폐지**(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세액 결정)
- ▶ (입지) 공장총량 범위 내 유턴기업 우선 배정, **항만배후단지 입주지원 강화**

③ **(수출력 보강)** 수출기업 **현장애로 해소, 비대면 수출** 등 집중 지원

▪ 출입국, 물류 등 기업들의 당면한 수출애로 해소에 주력

- ▶ (출입국) 국가간 이동제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 운영**(~’21년말), **기업인 격리의무 면제, 백신 우선접종** 등 지원
- ▶ (물류) 임시선박 투입(월 2척 이상), 중소·중견기업 **전용 선적공간** 제공(미주 350TEU, 유럽 50TEU), **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조기투입**(’20.4~’21.6월) 등

▪ **코로나19 상황**을 감안한 **비대면·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**

- ▶ 무역협회·KOTRA·중진공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**비대면 마케팅 One-Stop 서비스**(온라인 홍보·화상상담+전시+현지판매) 구축 지원
- ▶ 국내 유망상품의 **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확대**(’21년 2,500개사)

▪ 수출기업 **유동성 공급**을 확대하고 **해외수주 활동**을 적극 뒷받침

- ▶ (수출금융) ‘19년 217조원, ‘20년 241조원, **‘21년 256조원(예정) 적극 공급**
- ▶ (해외수주)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(’20.6월) 마련 → **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**(Team Korea) 구축, **글로벌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 펀드 조성**(1.2조원) 등

③ **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도 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.**

① **(한국판 뉴딜)**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**「한국판 뉴딜 종합계획」** 마련(’20.7월) 및 **후속조치 이행**

- 디지털 뉴딜·그린 뉴딜·안전망 강화·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**재정투자·민간자본 활용, 법·제도개선** 등 추진 중

- ▶ (재정투자) '25년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(디지털 + 그린뉴딜 + 안전망강화) 계획
→ 10대 대표과제 중심 '20년 4.8조원, '21년 21.0조원(본예산) 집중 지원

디지털 뉴딜	디지털·그린 융복합	그린 뉴딜
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	④ 그린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 산단	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

- ▶ (민간자본 활용) 정책형 뉴딜펀드 '25년까지 20조원 조성('21년 4조원) 및 투자처 발굴·집행중
* 4조원 중 3조원 위탁운용사 既선정(2.26),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·공고 중(4.23~)
- ▶ (법·제도개선) 「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」 마련·입법 추진 중
* 디지털경제전환법, 녹색전환·기후위기법, 에너지전환·분권법, 지역균형뉴딜법 등

② (탄소중립 추진)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「2050 탄소중립 3+1 전략*」 마련('20.12월) 및 후속조치 이행

* ①경제구조의 저탄소화, ②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, ③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+ 제도적 기반 강화(기후대응기금 신설, P4G 정상회의, 그린뉴딜 ODA 확대 등)

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**시나리오 검토** 및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 마련, **기후대응기금 신설** 등 관련 제도 정비 추진 중

③ (새성장동력 육성) 「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」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의 핵심인 **BIG3 산업의 성장동력화·성과창출** 집중 지원

미래차	▶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,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 추진
시스템 반도체	▶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→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One-stop 지원
바이오	▶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, 화이트바이오 핵심기술 R&D·사업화·인력양성 추진

- CVC·복수의결권** 등 벤처 생태계 핵심과제의 입법¹⁾을 추진하고, **新사업** 도입을 위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으로 「**한걸음 모델**」 구축²⁾

1)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,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

2) ①농어촌 빈집숙박('20.9월), ②산림관광('20.12월), ③도심 내국인 공유숙박('21.5월 발표 예정)

- 서비스업 스마트화·R&D 확대**(‘21~'25년 7조원) 등 서비스업 혁신 지속

④ (인구 대응) 「인구TF」를 통한 인구감소 충격 및 지역소멸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, 「저출산·고령화 기본계획」 주요과제*도 차질없이 이행중

* ①영아수당 ②부부 육아휴직 ③공공 보육시설 ④다자녀가구 주거교육지원 ⑤첫만남 꾸러미

⑤ (포용 강화)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 등 추진

- ▶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·소득지원을 위해 **국민취업지원제도** 도입('21.1월~)
- ▶ 「**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**」 발표('20.12월) →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및 소득파악체계 구축
* ('20.12~) 예술인 → ('21.7~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→ ('22.1~) 플랫폼종사자 등
- ▶ 「**필수노동자 보호대책**」 발표('20.12월) → **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**(‘21.5월)
*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방역, 건강보호,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

Ⅲ. 우리 경제 10대 성과

Part1. 거시경제

1

코로나 위기대응

위기충격 최소화 &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

* 경제규모 순위 : ('19)12 → ('20)10위, 주요 선진국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이전 수준 회복

2

수출력 견지

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

* 수출 6개월 연속 증가, 21.1~4월 수출액(1,977억불) 역대 최고치 경신

3

대외건전성 제고

위기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

* CDS 프리미엄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(5.5일<뉴욕장 기준>, 19bp)

Part2. 혁신성장

4

창업·벤처 확산

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“제 2의 벤처붐 확산”

* 유니콘 기업수 : ('17)3 → ('20)13개 / 벤처투자금액 : ('17)2.4 → ('20)4.3조원

5

미래먹거리 발굴

DNA·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

*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: ('17)14.4 → ('20)19.3조원 / 전기차 보급대수 5배, 수소차 64배 증가

6

규제혁신

선제적·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

* 규제샌드박스 449건(21.4월말 기준),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

7

공정경제 착근

기업지배구조 개선 &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

* 순환출자 기업집단<고리수> : ('17) 10<282> → ('20) 4<21>개

Part3. 포용성장

8

일자리·가계소득 확충

일자리·가계소득 확충 & 코로나 충격 최소화

* 가계소득 증가율(%) : ('19.1Q)1.3 (2Q)3.8 (3Q)2.7 (4Q)3.6 ('20.1Q)3.7 (2Q)4.8 (3Q)1.6 (4Q)1.8

9

안전망 강화

춡춡하고 튼튼한 사회·고용안전망 구축

* 고용보험 가입자수 : ('16) 1,266 → ('20) 1,411만명

10

삶의질 제고

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

*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,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,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

1. 코로나 위기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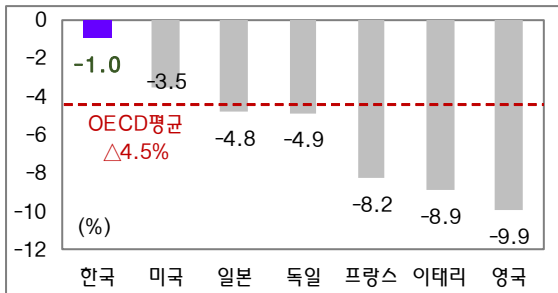
“위기충격을 최소화”한 데 이어 “빠르고 강한 경제회복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
- ▶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, 총 **310조원** 규모(GDP 16% 수준)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추진

① '20년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($\Delta 1.0\%$, G20 국가중 3위)

- 글로벌 경제규모가 2단계 상승(12→10위)하며 Top10 진입 & 1인당 GDP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 추월

주요국 '20년 성장률



* 출처 : IMF

'19→'20년 한국 경제규모 순위

'19년		'20년	
(1위) 미국	(2위) 중국	(3위) 일본	
(4위) 독일	(5위) 영국	(6위) 인도	
(7위) 프랑스	(8위) 이태리	※ 20년 기준	
9위 브라질		9위 캐나다	
10위 캐나다		10위 한국	
11위 러시아		11위 러시아	
12위 한국		12위 브라질	

* 출처 : IMF

② '20.4/4~'21.1/4, 2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 달성

* 시장 전망치/실적 : ('20.4/4) 0%대 중후반 / 1.2% ('21.1/4) 0%대 후반~1% / 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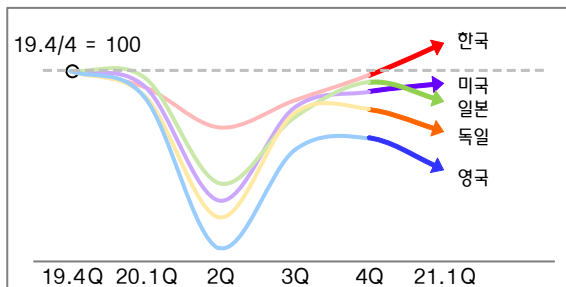
-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통해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직전('19.4/4분기) GDP 수준 돌파

글로벌 Top10국 위기직전 대비 '21.1/4 GDP

('19.4/4 = 100, 선진국, 신흥국)

1	미국	99.1	6	인도	102.5
2	중국	106.9	7	프랑스	95.4
3	일본	97.7	8	이태리	93.0
4	독일	94.7	9	캐나다	98.1
5	영국	90.7	10	한국	100.4

주요 선진국 GDP 추이



* '21.1/4 GDP는 일본·영국·인도·캐나다는 IB 평균 전망치 반영, 그 외 국가는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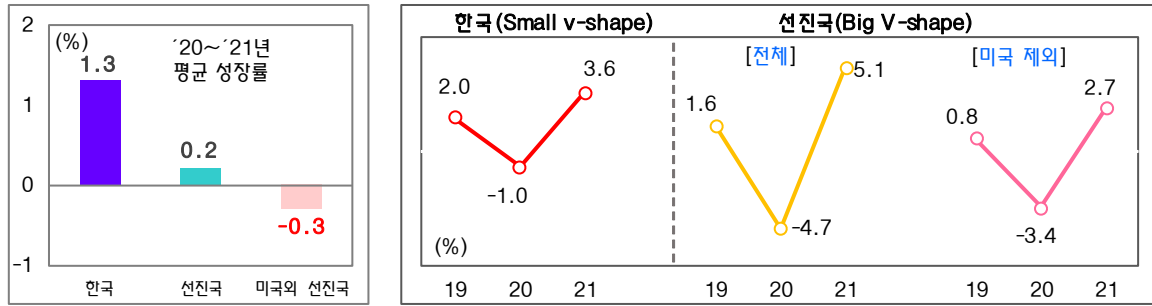
③ IMF '21.4월 전망상으로 금년에 위기 이전 GDP를 회복하는 국가는 G20 중 8개국, 그 중 선진국은 미국·한국·호주 3개국뿐

G20 국가 '21년 GDP 수준(IMF '21.4월 전망 기준, '19년 = 100, 선진국, 신흥국)

중국	110.9	터키	107.9	인도	103.6	미국	102.7	한국	102.6
인도네시아	102.1	호주	102.0	러시아	100.6	브라질	99.4	캐나다	99.4
사우디	98.7	독일	98.5	일본	98.3	프랑스	97.1	멕시코	96.4
남아공	95.9	아르헨티나	95.3	이태리	94.9	영국	94.9	EU	98.0

④ 코로나 위기 “충격”과 “회복”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
‘20~’21년 평균성장률도 선진국그룹을 큰 폭 상회할 전망

한국 및 선진국 그룹 ‘20~’21년 성장률 추이(% , IMF ‘21.4월 전망 기준)



2. 수출력 견지

위기 속에서도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.

- ▶ 무역금융·마케팅 등 단기 지원과 함께 시장 다변화 노력을 꾸준히 병행,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현장으로 해소, 비대면 수출 지원 등에 역점

① '18년 사상최초 수출 6,000억불 돌파로 수출 강국 위상 제고

* 연간 수출액(억불) : ('15) 5,268 ('16) 4,954 ('17) 5,737 ('18) **6,049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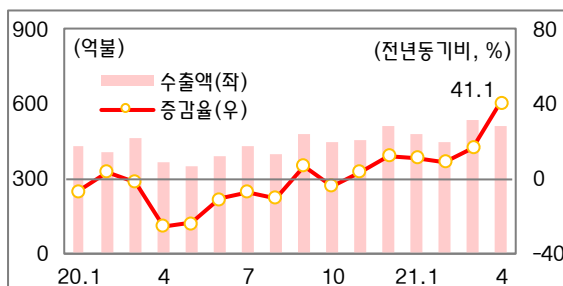
② '20년 하반기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 + 新성장 분야 수출도 급성장

- 최근 6개월 연속('20.11월~'21.4월) 수출 증가 & '21.4월 증가율(+41.1%)은 10년래 최고치 & '21.1~4월 수출액(1,977억불)은 역대 최고액 경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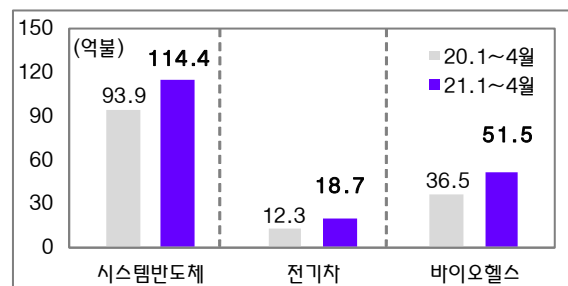
- 미래먹거리인 BIG3(시스템 반도체·전기차·바이오헬스) 수출 급증

* '21.1~4월 수출 증가율(%) : (시스템반도체) 21.8 (전기차) 52.7 (바이오헬스) 41.0

최근 수출액 및 증감 추이



新성장 품목 수출 추이



* 출처: 관세청

③ '20년 해외 수주도 위기를 딛고 5년 만에 최고액(351억불) 기록

* 해외건설 수주액(억불): ('15) 461 ('16) 282 ('17) 290 ('18) 321 ('19) 223 ('20) **351**

3. 대외건전성 제고

국제사회는 우리 대외건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.

- ▶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관리, 통화스왑, 비대면 방식 경제설명회(IR) 개최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총력

❶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·일본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지속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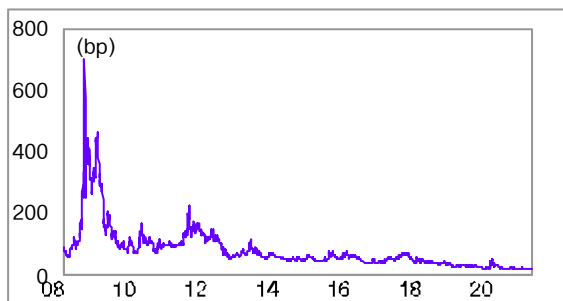
* 무디스('15.12월~, Aa2), S&P('16.8월~, AA), 피치('12.9월~, AA-)

※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 하향 조정

❷ 국가부도위험(CDS프리미엄)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경신

* CDS 프리미엄(bp, 5년물 외평채, 기말) : ('17)53 ('18)39 ('19)22 ('20)22 **(21.5.5)19**

CDS 프리미엄(5년물) 추이



* 출처: 블룸버그

주요국 신용등급 비교

	S&P	무디스	피치
AA(Aa2)			
AA-(Aa3)			
A+(A1)			
A(A2)			

* 출처: S&P/무디스/피치

❸ 외환보유액(세계 9위), 단기외채 비율 등도 양호한 상황

* 외환보유액(억불, 기말) : ('08)2,012 ('15)3,680 ('20)4,431 ('21.3)4,461 (4)4,523<사상 최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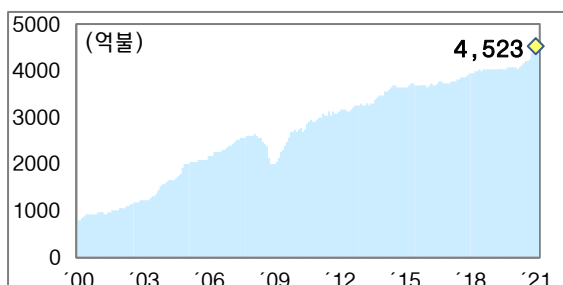
* 단기외채비율(% '20.3/4) : (한국)36.2 (터키)167.9 (아르헨)92.8 (말련)82.9 (인나)32.9

❹ '20년 9월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성공적 외평채 발행(14.5억불) → 코로나 위기 속 해외투자자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 재확인

* 유로화(5년물, 7억유로) : 비유럽 최초 마이너스 금리 국채(-0.059% = 유로 미드스왑 + 가산금리 35bp)
달러화(10년물, 6.25억불) : 발행금리(1.198% = 미 국채금리 + 가산금리 50bp) 사상 최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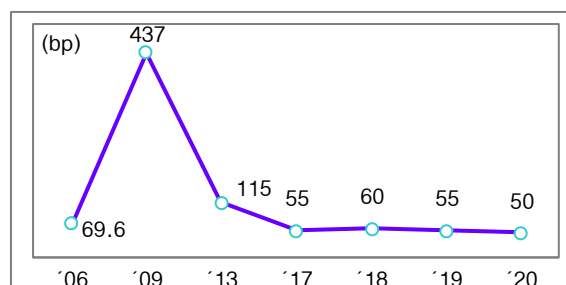
- 금융시장 불안 대응여력(외환보유액) 확충
& 민간 해외채권의 벤치마크로서 차입비용 절감 효과

외환보유액 추이



* 출처: 한국은행

달러표시 외평채 10년물 가산금리



* 출처: 블룸버그

4. 창업·벤처 확산

벤처·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“제2벤처붐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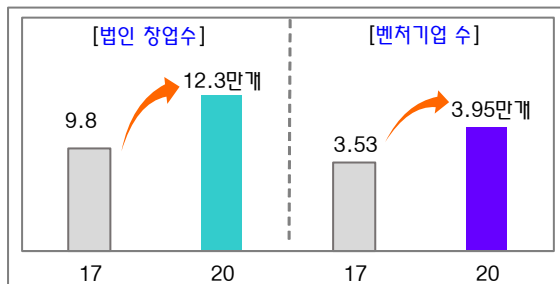
▶ 「창업-투자-성장-회수-재투자」로 선순환되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, K-유니콘 프로젝트,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강력 추진

① (창업) 법인 창업 및 벤처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, '20년 법인 창업수는 사상최대치(12.3만개) 기록

- 특히,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2,500여개 증가하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(+5.3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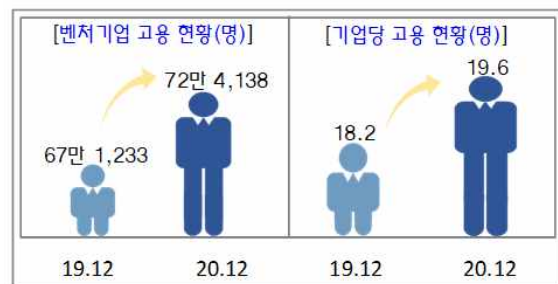
※ 전체 고용증가(5.3만명) 중 약 35%는 청년(1.9만명), 44%는 여성(2.3만명)
 - 벤처기업 고용(명, '19→'20년말) : (전체) 671,233 → 724,138 <+5.3만명>
 (청년) 169,527 → 188,056 <+1.8만명> (여성) 203,540 → 226,615 <+2.3만명>

법인 창업수 및 벤처기업수



* 출처: 중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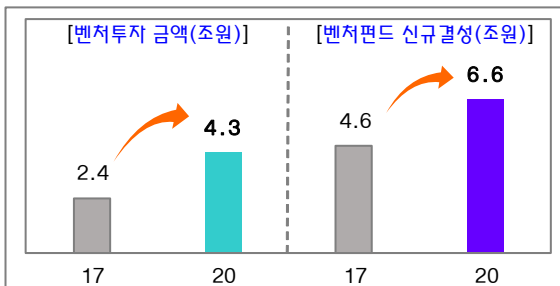
벤처기업 고용 현황



* 출처: 중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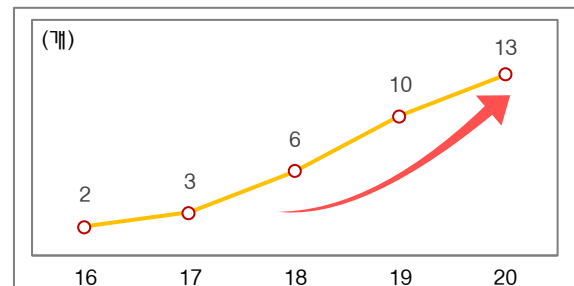
② (투자) 혁신 분위기가 본격 확산되면서 벤처투자 금액('20년 4.3조원) 및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('20년 6.6조원) 모두 역대 최대치 기록

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신규결성액



* 출처: 중기부

유니콘 기업수



* 출처: 중기부

③ (성장)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계 6위 달성('20.12월 기준, 13개)

- * 유니콘 기업수 : ('17) 3개 → ('20) 13개(2개사는 CB insight에 미등재된 비상장 기업)
- * 주요국 유니콘 기업수(CB insights, '20.12) : (美) 251 (中) 121 (印) 27 (英) 24 (獨) 12 (韓) 11

④ (회수)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으로 상장시장을 통한 회수가 활발해지면서 '20년 청산벤처펀드는 역대최고 수익률 기록

- * 코스닥 상장기업수(개) : ('16) 1,208 ('17) 1,266 ('18) 1,323 ('19) 1,405 ('20) 1,468
- * 청산벤처펀드 수익률(%) : ('16) 1.1 ('17) 5.6 ('18) 7.2 ('19) 7.3 ('20) 9.1

5. 미래먹거리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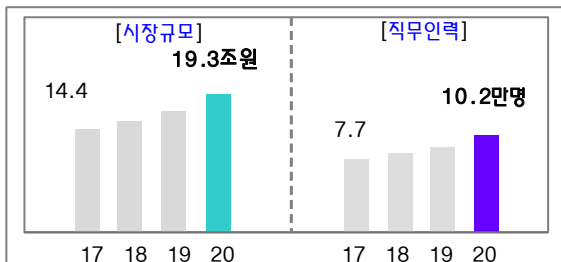
DNA·BIG3 등 신산업 물꼬를 트고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도 강화 중이며, 글로벌 최고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

- ▶ 혁신 인프라(DNA) 및 핵심 신산업(BIG3)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, 소재·부품·장비,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

① (DNA) 초산업과 융·복합이 가능한 대규모 혁신인프라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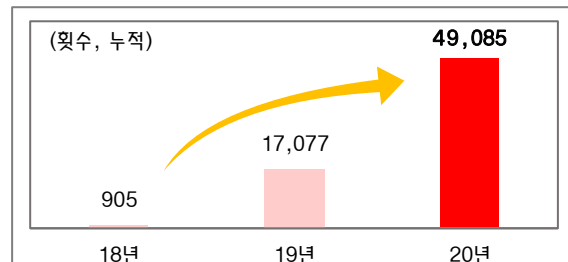
- ① 데이터시장 규모가 20조원에 근접하고 직무인력 10만명 돌파,
- ② 세계 최초 5G 상용화('19.4월), ③ AI 활용도도 대폭 증가

데이터산업 시장규모·직무인력



* 출처: 과기정통부

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횟수



* 출처: 과기정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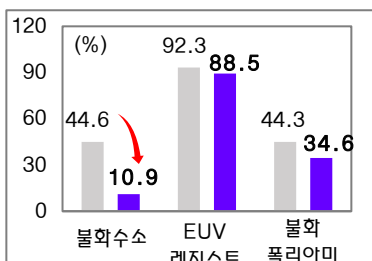
② (BIG3) 시장규모 확대, 수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 창출

미래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기차 보급대수 5배 증가('17년 2.5만대 → '20년 13.8만대) ▶ 수소차 보급대수 64배 급증('17년 170대 → '20년 10,945대)
시스템 반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(전력효율 10배이상) 개발('20.4) ▶ 극자외선(EUV)기반 7나노공정 세계최초 가동('19.4)
바이오 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구개발 투자규모 지속 확대로 기술수준 제고, K-방역 성과 등으로 수출 큰 폭 증가 * 정부 R&D 투자액 : '21년 1.7조원(전년대비 +30%) * 바이오헬스 수출액(억불) : ('17) 123 ('18) 146 ('19) 154 ('20) 219

③ (소재·부품·장비)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등 100대 핵심품목 대외의존도가 완화된고, 소부장 유턴기업 역대 최대실적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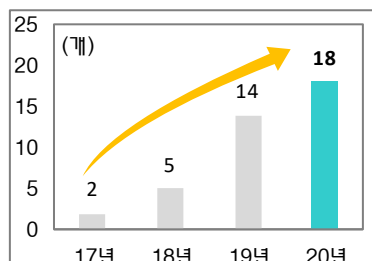
- 수요·공급기업, 연구소 참여 양산성능평가 확대 등 R&D부터 양산·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연대·협력기반 강화

3대 품목 對日의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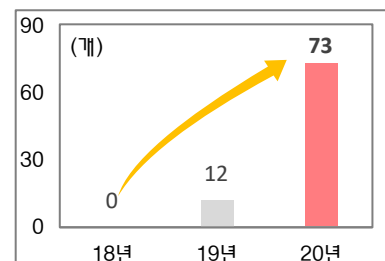
* 출처: 무역협회

소부장 유턴기업수



* 출처: 산업부

양산성능평가참여 수요기업



* 출처: 산업부

④ (제조업) 세계 3위권*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수출 확대 등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

- * 제조업 경쟁력 순위(CIP지수 기준) : ('15) 4위 ('16) 5위 ('17) 3위 ('18) 3위 <'20.7월 발표>
↳ 유엔산업개발기구(UNIDO)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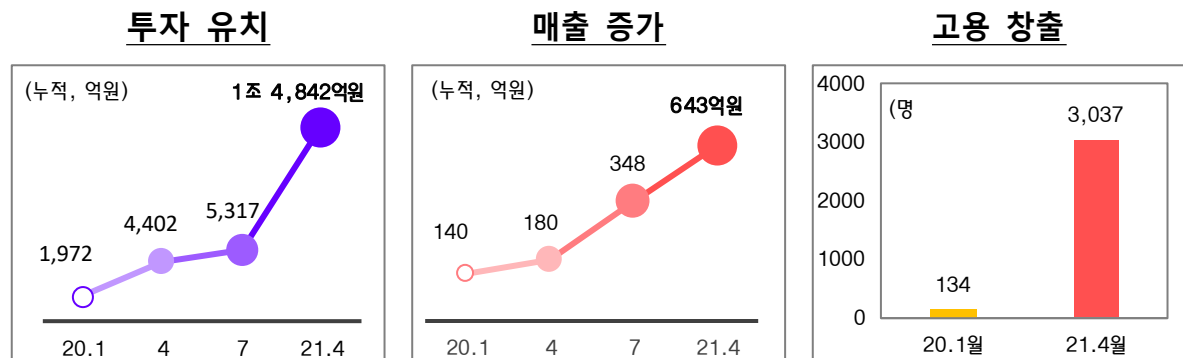
6. 규제 혁신

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▶ 先허용-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,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혁신 추진 →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

❶ 규제샌드박스 449건 승인(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행정 등, '21.4월말) → 1.5조원 투자유치, 643억원 매출 증가, 3,037명 고용창출 효과

* (사례)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('19.2월),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('19.12/'20.5월),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('20.6월),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용('19.9월) 등



▪ 해외진출, 기업이전, 대·중소기업 상생 등 파급효과도 창출

* (해외진출) 라테아트 3D 프린터<대만·일본·칠레·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대 수출>
(기업이전)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<현대차 자율주행 핵심엔지니어 출신이 세운 오토노머스2z 유치>
(대중소 상생) 경북 배터리 특구<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·활용에 있어 상생>

❷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→ 총 17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여 6,690억원 투자유치, 1,255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혁신 촉진



❸ 총 583건의 법령·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
* 예(세종시): 공동주택 입주자격 열거조항(지역·졸업 요건) 삭제 → 1인 무주택 청년 입주기회 제공

❹ 산업별 협회·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총 306건 현장규제를 과감하게 개선

* 예: 코로나이후 온라인사업장 인적·물적·시설 요건 완화, 온라인 판매허용 품목 확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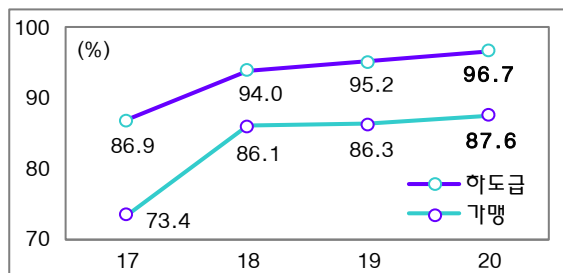
7. 공정경제 착근

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공정 및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
- ▶ 경제주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“공정한 시장질서” 확립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노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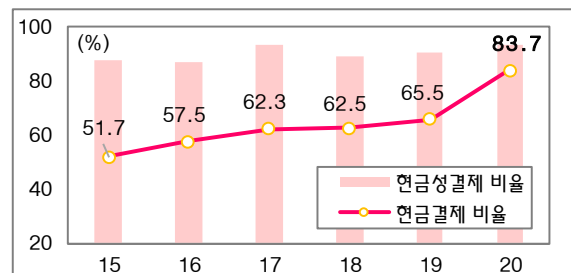
- ① 하도급·가맹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등 공정거래 질서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
- 하도급 거래시 현금결제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공정성 제고

하도급·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



* 출처: 공정위(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)

하도급거래 현금결제 비율 추이



* 출처: 공정위(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)

- ②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가 대폭 완화되고,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한 집중·서면·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크게 확대

순환출자 기업집단 및 고리 수 추이

(단위: 개)	'17년	'18년	'19년	'20년
순환출자기업집단	10	6	4	4
순환출자 고리	282	41	14	21

* 공정위,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

집중·서면·전자투표제 도입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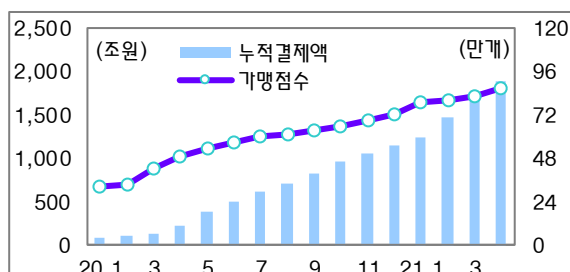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)	'17년	'18년	'19년	'20년
제도도입 회사 수	51	85	100	147
전체 상장사 수	169	253	250	266
제도도입 비율(%)	30.2	33.6	40.0	55.3

* 공정위,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

- ③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로페이·상생결제 등 상생·협력 기반도 빠르게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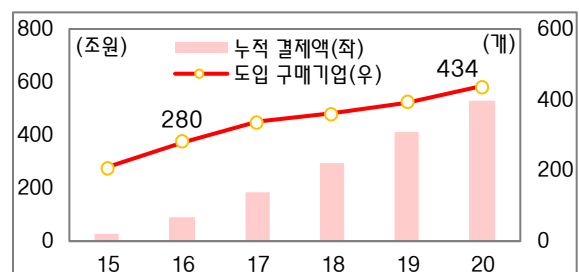
- * 제로페이 운용규모('21.4.30일) : 누적 결제액 1조 9천억원, 가맹점 87만개
- * 상생결제 운용규모('21.3월말) : 누적 결제액 560조원, 도입 구매기업 436개사

제로페이 결제액 및 가맹점 수 추이



* 출처: 중기부·간편결제진흥원

상생결제 운용 실적



* 출처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8. 일자리·가계소득 확충

“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”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,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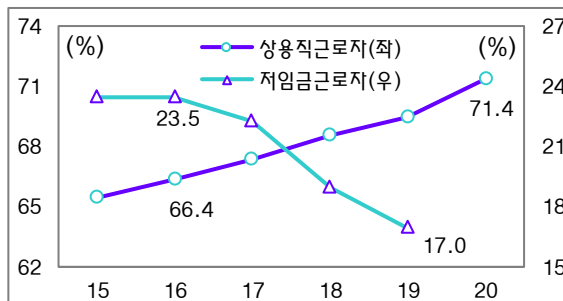
▶ 민간·공공부문 ‘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’와 취약계층 일자리·소득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,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고용유지·안정 노력 강화

① '19년까지 고용률과 함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이 동반 개선

* 고용률(% , 15~64세) : ('16) **66.1** ('17) 66.6 ('18) 66.6 ('19) **66.8** ('20) 65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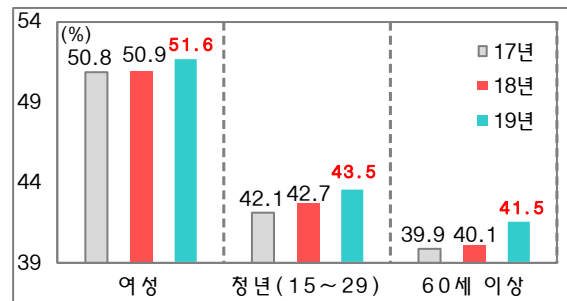
▪ 특히, 여성·청년·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노력 강화 등에 힘입어 취약계층 고용률도 개선

상용직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



* 출처: 통계청, OECD

여성·청년·고령층 고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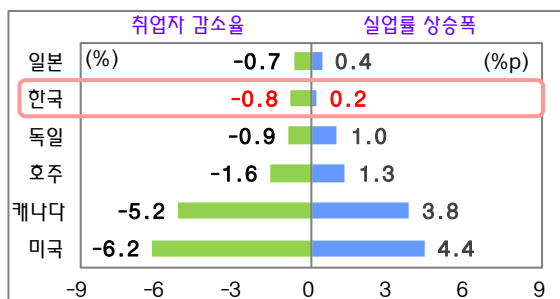


* 출처: 통계청

② '20년에는 코로나에 따른 전례없는 전세계적 고용 충격 속에서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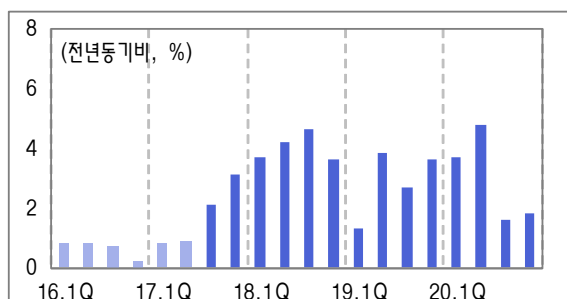
▪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 충격 최소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소득 증가세도 지속 유지

'20년 취업자 감소율·실업률 상승폭



* 출처: OECD

가계소득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9. 안전망 강화

사회·고용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튼튼해졌으며,
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각지대도 최대한 보완중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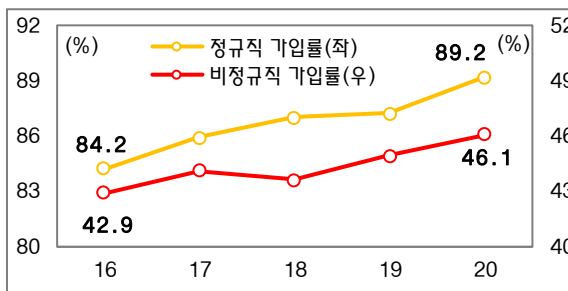
- ▶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, 기초생활보장제도·기초연금·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도 지속 강화

❶ 고용보험가입자수 및 기초생활수급자수·수급률이 확대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꾸준히 축소

* 고용보험가입자수(만명) : ('16)1,266 ('17)1,296 ('18)1,343 ('19)1,386 ('20)1,4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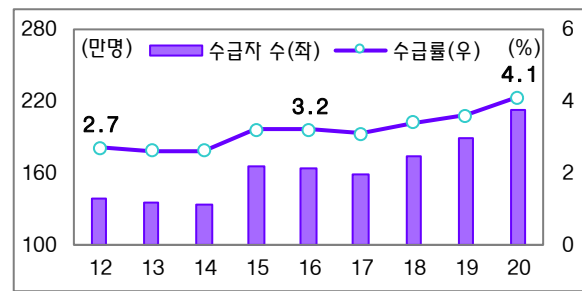
*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(만명) : ('16)163 ('17)158 ('18)174 ('19)188 ('20)213

고용보험 가입률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

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



* 출처: 보건복지부(수급률 = 수급자 수 ÷ 전국민)

❷ 지니계수·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'16년부터 코로나 확산 이전인 '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

* 지니계수(가금복) : ('16) 0.355 ('17) 0.354 ('18) 0.345 ('19) 0.339

* 소득 5분위배율(배, 가금복) : ('16) 6.98 ('17) 6.96 ('18) 6.54 ('19) 6.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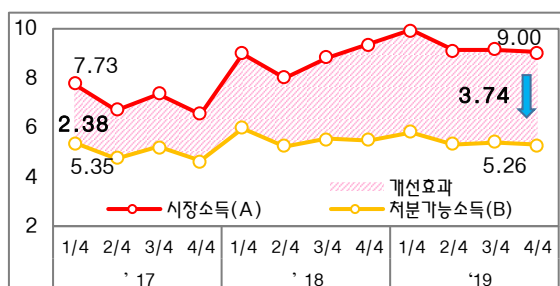
- 공적이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정부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 효과(= 시장소득 5분위배율 -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)도 크게 확대

* 공적이전소득('17.1/4→'19.4/4, 만원) : (전체)31.5→37.3 (1분위)34.4→47.3 (5분위)30.6→29.2

❸ '20년의 경우 코로나 충격으로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으나, 정책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완충하면서 분배악화를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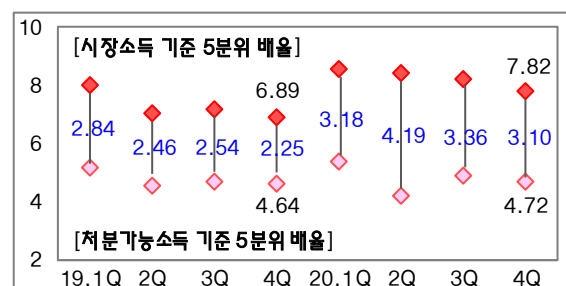
* '20.4분기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(전년대비, %) : (1분위)17.1 > (5분위)11.7

'17~'19년 5분위배율 및 분배개선효과



* 출처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/경찰조사 표본 기준)

'19~'20년 5분위배율 및 분배개선효과



* 출처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/전용표본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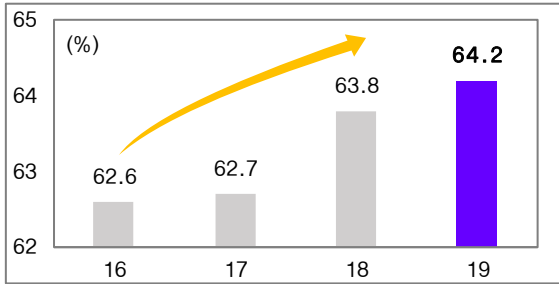
10. 삶의 질 제고

“핵심 생계비 경감”으로 가계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였습니다.

▶ 의료·교육·주거·통신·교통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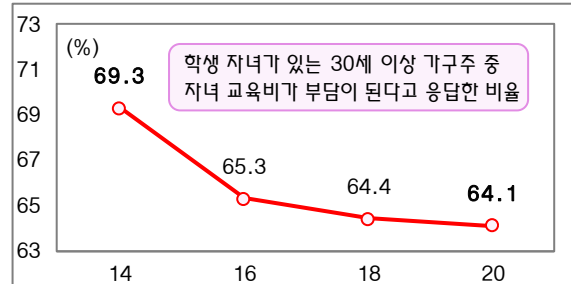
- ① **의료** 비급여의 급여화,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

건강보험 보장률 추이



* 출처: 보건복지부

교육비 부담도 추이



* 출처: 통계청(사회조사)

- ② **교육** 누리과정·교육급여·고교무상교육·반값등록금 등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소과정에 걸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

- ③ **교통** 알뜰교통카드 도입('20.3월~)으로 대중교통요금 최대 30% 경감,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정으로의 1.3배 수준까지 인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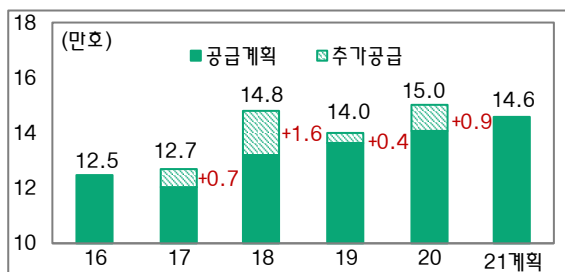
* 민자고속도로 통행료(재정으로 대비) : ('18) 1.43배 → ('20) 1.30배

- ④ **통신**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상향(20→25%), 취약계층 요금감면(저소득층·기초연금수급자, 최대 월 1.1만원), 비대면 활동지원(2만원) 등

- ⑤ **주거**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(목표치 지속 상회)를 통해 '2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(10년이상) 재고율은 OECD 평균(8%) 달성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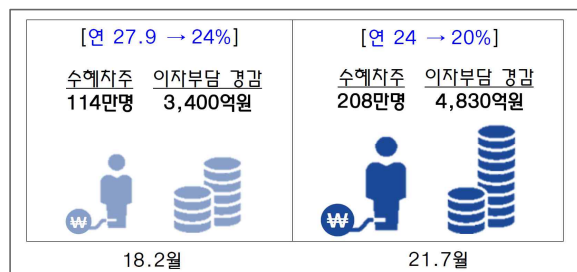
*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(%) : ('16)6.3 ('17)6.7 ('18)7.1 ('19)7.4 ('20)8.0

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



* 출처: 국토교통부

최고금리 인하의 이자부담 경감효과



* 출처: 금융위원회

- ⑥ **금융** 법정 최고금리 인하,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으로 저소득·저신용 계층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

* 법정 최고금리(%) : ('16.3월~) 年 27.9 → ('18.2월~) 24 → ('21.7월~) 20

*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(조원) : ('16)5.0 ('17)6.9 ('18)7.2 ('19)8.0 ('20)8.9

IV. 종합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

1. 종합 평가

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**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**을 바탕으로 과거 누적된 **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**하고 **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**하는데 진력

- 코로나 위기,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
- BIG3 등 신산업 중점 육성, 벤처·창업 활성화,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
-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가계소득 기반 확충, 취약계층 고용·사회 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

② 그 결과 코로나 위기에서 **가장 빠르게 거시경제를 회복**시켜 가면서 **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기반도 확실히 구축** 중

-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한 데 이어 최근 2분기 연속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며,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재차 입증
- 제2 벤처붐 확산, 新산업 시장·수출규모 확대 등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·2050탄소중립 등도 본격 추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, 기초생보 확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축소시키고,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

③ 다만,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던 가운데 **예상치 못한 위기**로 **일부 성과가 제약**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최근 **구조적 도전요인**도 가속화

- 일자리·분배 지표 등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간의 개선흐름이 주춤*

* 다만,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으로 일자리·분배지표의 악화폭은 최소화

-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, 내수·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·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
-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및 디지털·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, 인구충격 확대 등 우리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

2. 향후 정책방향

- ◇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 경주
- 우선 금년 3%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 집중
 - 동시에 Post-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, 경제·사회 구조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

1 (회복) 최근 경기 회복흐름이 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어지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활력 제고에 총력

- 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 주체들이 끝까지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
-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(63%)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·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*도 속도감 있게 집행
 - * 버팀목⁺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5월말까지 80% 지급 추진
 -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'제도화 방안'도 마련
- ② 글로벌 경제흐름 업턴 기회를 활용, 기업 등 민간의 기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노력 강화
- (투자) 기업·민자·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활동 지원 강화
 - (수출) 물류·출입국 지원 등 수출기업들의 당면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FTA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
 - (소비) 3대 소비촉진 패키지*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「대한민국 동행세일」(6~7월)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소비회복 여건 조성
 - * ①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, ②자동차개소세 30% 인하, ③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사업 시행
 - (고용) 민간채용 고용장려금·고용유지지원금 확대, 특별고용 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민간 일자리 창출·유지를 적극 뒷받침
- ③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부동산·물가·가계부채·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·관리

- ▶ (부동산) 투기수요 차단·실수요자 보호·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·서민주거 안정 주력
- ▶ (물가) 2분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점검·선제대응
- ▶ (가계부채) 부채 총량관리,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마련
- ▶ (대외) 글로벌 인플레이션, 美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대응 및 대외신인도 제고

② (도약) 단기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,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**선도형 경제 대전환 노력** 가속화

- ①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**한국판 뉴딜, BIG3** 등 핵심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여 **가시적 성과**로 연결
 -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('21년 21조원)로 마중물을 마련하고,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의 뉴딜 생태계 유입도 촉진
 - 반도체·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, 기술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·지원 추진
 -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·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노력 강화
 -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, 기업형 벤처캐피탈(CVC) 허용 등 제2 벤처 붐 지속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완비
- ② 친환경·저탄소 경제 전환, 인구감소·저출산 심화 등 **경제 구조 변화 흐름**에도 보다 적극 대응
 -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('20.12월)」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,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,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
 - 제3기 인구 TF를 중심으로 3대 인구리스크(①인구감소, ②지역소멸, ③초고령사회 압박) 심화에 대응한 추가 대응책도 적극 마련

③ (포용) 경제 회복·도약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**경제·사회 구조 전반의 포용성 제고**에도 만전

- ①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주요 부문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지속 강구
 -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구조전환 등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
 -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, 고교 무상교육 실시, 주거급여·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지속
 - 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·사회안전망도 지속 확충
 - 국민취업지원제도,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에 따른 고보 가입대상 확대* 및 관련 소득과약체계 구축 등 인프라 보강을 차질없이 추진
- * ('20.12~) 예술인 → ('21.7~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→ ('22.1~) 플랫폼종사자 등